

보도설명자료 (‘14. 4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규제완화, FTA 역진방지조항 관련 정부 사전연구
용역 한번도 안했다(‘14.4.9(수), 한겨레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역진방지 조항(래킷)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**줄속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**하고 있다고 지적
 - “그간 추진된 규제 완화에 대해 래킷 적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, 정부 내 래킷 위반여부 협의체제 부재”
 - “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할 경우, ISD 제소 대상이 돼 배상 의무 발생”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☐ 규제완화 정책 줄속 추진 지적에 대한 입장

- ☒ 줄속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**사실이 아님**
 - 정부는 **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**를 목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원활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 중
 - 완화된 규제를 추후 재강화할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, **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추진 취지에 맞지 않음**
 - 또한 추진 과정에서는 비용/편익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**신중하게 추진**하고 있음

☐ 정부 내 협의 체제 부재 및 ISD 제소 우려 지적에 대한 입장

- ☒ 정부가 규제완화에 대해 래킷 적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, 규제 완화시 래킷 위반으로 ISD 제소대상이 된다는 지적은 **사실이 아님**
 - 정부는 서비스·투자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**통상 규범 합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**하고 있음
 - 한편, 우리가 기체결한 FTA상 보건·환경·교육·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**공공성이 높은 분야**는 래킷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미 미래유보하고 있어, 향후 필요시 해당 분야에서 **규제 강화가 가능함**
 -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경우에도 ISD 제소는 협정상 의무에 위배 되는 정부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, **사실이 아님.** /끝/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김명준 과장(044-203-5810)